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1.27(금) ~ 2023.02.02(목)

제공일시 2023 02 10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산업통상자원부 kpc 한국생산성본부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1.27(금) ~ 2023.02.02(목)

제공일시 2023 02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청정기술 생산기업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Reuters, 2023.01.31) Jan Strupczewski 기자

- EU가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수소 및 배터리 등 청정기술 생산기업은 보다 빠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패스트트랙을 도입하할 계획임
- 계획 초안에는, EU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빠른 허가절차를 위해 보다 단순한 규제 체계를 만들 계획이 담겨있음
- 청정기술 공급망 개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프로젝트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배터리, 탄소 포집 및 저장, 재생에너지, 재생가능 수소, ESS, 저탄소 건설 기술 등이 해당사항임
- EU는 이러한 청정기술에 관한 EU 전체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순배출 제로 제품의 요건을 정의하고, 정부 공공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임

2. 유럽이 내놓는 美바이든 맞불 계획…"보조금 규칙 완화"

(한국경제, 2023.01.31) 김리안 기자
(글로벌 이코노믹, 2023.01.31) 박경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기 위해,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 지급 규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음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 EU 집행위원회의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확보, 유럽 당국이 역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항목 신설 등 보조금 규칙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 이번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대상은 그린수소, 바이오연료 등으로 대폭 확대되고,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마련한 넥스트제너레이션 기금 8000억유로의 일부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용할 수 있게 설계됨
- 또 유럽 공동이익 프로젝트(IPCEI)의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보조금 규칙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임

3. "희토류 직접 캔다"…자원 안보 힘쏟는 서방

(아시아경제, 2023.01..30) 이지은 기자

- 유럽과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음
- 희토류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품목인 만큼, 중국산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리스크를 탈피하겠다는 계획임
- 이달 초 스웨덴에서는 유럽 최대 규모의 희토류 원소 광맥이 발견된 이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희토류 채굴과 유통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프랑스도 '하얀 석유'로 불리는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 리튬을 자체 채굴하고 있음
- 미국 역시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채굴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했음

1. ESG 최하등급 상장사 17배 폭증…"기업현실 고려 안해" 아우성

(서울경제, 2023.01.29) 심기문 기자

- KCGS가 지난해 말 평가기준을 강화하면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상장사가 총 342곳으로 2021년 20곳에서 17배 증가한 반면, B+ 이상 기업 비율은 2021년 36.9%에서 지난해 27.1%로 줄었다고 밝혔음
- KCGS는 글로벌 동향 반영,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 역할 강조 등 기준을 강화했으며, 제도뿐 아니라 운영과 성과까지 평가에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음
- 하지만 지난해 평가대상 기업 중 49.4%가 피드백에 참여할 정도로, 공시도 정립되지 않았고 평가기준도 공개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도 높음
- 이뿐 아니라 주주행동도 강화되는 추세로, 얼라인파트너스가 3월 정기 주총을 앞두고 7대 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주주행동에 나서며, 소액주주도 주총 표대결을 예고하고 있음

2. 환경부, 탄소중립·순환경제 '마중물'…포스코·SK이노 시름 덜까(종합)

(이데일리, 2023.01.31) 김경은 기자
(한겨레, 2023.01.31) 남종영 기자
(머니투데이, 2023.01.31) 김훈남 기자
(매일경제, 2023.01.31) 이희조 기자

- 환경부가 국내에서도 '탄소차액지원제도(CCfD)' 도입안을 검토하고, 열분해유 사업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통적 환경산업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환경부는 올 연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철강업을 중심으로 탄소차액지원제도(CCfD)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음
- 또 환경부는 올해를 순환경제 원년으로 삼고, 후진적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수리용이성'을 제고하는 기준을 정하고, 유통 포장재 감량 노력을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해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계획을 밝힘
- 이외에도 정부가 다음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담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내놓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3. 기업들 '온실가스 감축' 역주행…상위 50대 3년새 5.9% 늘어

(한겨레, 2023.02.01) 김회승 기자
(청년일보, 2023.02.01) 이창현 기자

- 국내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한 2018년 이후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위 5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2억7277만t으로, 2018년(2억5765만t)보다 5.9% 늘었으며,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에서 6억7960만t으로, 6.6% 감소했음
- 다만, 매출액 1억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평균 28.5t에서 2021년 26.9t으로, 5.6% 감소했음
-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포스코의 배출량은 2018년 7312만t에서 2021년 7848만t으로, 7.3% 증가했으며, 이어 현대제철(2849만t), 삼성전자(1449만t), 쌍용씨앤이(1061만t), 에쓰오일(1004만t), 엘지화학(902만t) 순이었음

1. “시총 상위 30대 기업, EU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대응해야”

(뉴시스, 2023.02.01) 우연수 기자

- 삼일PwC ESG플랫폼은 1일 ‘EU CSRD 주요 내용’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EU 소재 대규모 종속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해당 종속 기업의 대부분은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삼일PwC는 CSRD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이중 중대성’과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검증’을 꼽았음
- 이에 대해 ▲CSRD가 정한 비EU 기업의 공시 대상 범위에서 기업의 위치 및 의무 파악 ▲자사와 밸류체인 전반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내재화와 전문성 확보 ▲EU의 최종 공시 기준 및 회원국별 법률 제정 현황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음

2. 재생에너지 12% 투자했다더니 1.5%…기소당한 석유기업 ‘쉘’

(뉴스트리, 2023.02.02) 김나윤 기자

- 석유 대기업 쉘(Shell)이 재생에너지 지출을 과장한 혐의로 기소됐음
- 1일(현지시간),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위트니스는 쉘이 재생에너지에 지출하는 비용을 과장했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그린워싱 행위에 관해, 쉘이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쉘은 가장 최근의 연례보고서에서 2021년 지출의 12%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솔루션 부서에 투입됐다고 밝혔으나, 그러나 글로벌위트니스는 지출의 1.5%만이 실제 재생에너지 개발에 사용됐고, 나머지 부서 자원의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인 가스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음
- 글로벌위트니스는 쉘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재생에너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했음 쉘은 이러한 투자자 오도 혐의를 부인했음

3. 글렌코어, 배터리 전자여권 상용화 앞장

(Mining, 2023.01.26) Staff Writer
(Mining, 2023.01.19) Staff Writer

- 글렌코어가 세계 최초로 글로벌 배터리 얼라이언스(GBA, Global Battery Alliance)가 출시한 배터리 전자여권 ‘개념증명’의 파트가 되었다고 밝혔음
- 글렌코어는 카모토 구리회사(Kamoto Copper Company), LG엔솔, 테슬라와 협력해 ‘리소스(ReSource) 플랫폼’을 활용한 첫 번째 파일럿 전자여권을 주도했다고 발표했음
- 얼마 전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GBA는 배터리 전자여권 개념증명을 시작했음 GBA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시제품 배터리 여권에는 배터리의 기술, 사양, 주요 지속가능성 성능지표 보고에 관한 아우디 및 테슬라의 공급망 파트너의 예시데이터가 포함됐음
- 이에 더해 배터리의 탄소배출량, 아동노동, 인권 성과 등에 대한 보고와 데이터 수집정보도 포함됨

1. SK E&S, 북미 공항서 대규모 EV충전소 구축 성공

(그린포스트코리아, 2023.01.29) 황대영 기자

- SK E&S가 글로벌 기업 에이비스(Avis)와 함께 미국 휴스턴 공항 내 대규모 EV충전소 구축에 성공했음
- 이는 SK E&S의 美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유정준 SK 북미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 겸 패스키 대표이사의 진두지휘 아래, '모빌리티 기반의 글로벌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얻은 성과임
- 에이비스(Avis)는 연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추가 공항 입지를 확보하는 등 SK E&S와의 협력을 확대 적용하고 있음
-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의 대규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SK E&S는 이번 에이비스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향후 북미 지역에서 EV충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에너지솔루션 글로벌 Top-tier'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2. 삼성전자, 반도체 탄소배출 영향 산출 '전과정평가' 구축

(연합뉴스, 2023.01.30) 김아람 기자
(경향신문, 2023.01.30) 이재덕 기자

- 삼성전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전과정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음
- 전과정평가는 원료 채취·가공, 제품 제조·운송·사용·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물질, 에너지, 폐기물 등을 정량화해 환경 영향을 산출하는 절차임
- 삼성전자는 전과정평가를 국제표준에 맞게 운영하며, 이를 통해 산출한 탄소배출량도 신뢰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앞으로 한국·미국·중국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과 패키징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전 제품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를 운영할 계획임
- 나아가 반도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탄소배출뿐 아니라 물과 자원 등으로 확대해 종합 관리 체계를 수립할 방침임

3. GS퓨처스, 폐배터리 시장 공략 확대…호주 배터리 재사용 업체 추가 투자

(더구루, 2023.01.31) 오소영 기자

- GS그룹의 미국 벤처투자사 GS퓨처스가 호주 폐배터리 재사용 스타트업 '릴렉트리파이(Relectrify)'에 추가 투자를 단행했음
- 릴렉트리파이는 배터리 재사용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독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인버터 기술과 재사용한 폐배터리 9개를 결합해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리볼브'(ReVolve®)를 갖고 있음
- 리볼브는 120kWh부터 2MWh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명을 약 30% 이상 연장하고 동시에 초기 자본금도 최대 30% 절감할 수 있음
- 이번 투자에는 GS퓨처스와 호주 클린에너지파이낸스·에너지이노베이션캐피탈, 유럽 EDP벤처스 등 기존 투자자도 동참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1.27(금) ~ 2023.02.02(목)

제공일시 2023 02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영국, 탄소 포집 기술로 95% 탄소 포집해야 한다는 규제 발표

(EDIE, 2023.2.6)

- 영국 환경청(EA)이 블루 수소 생산에 관한 새로운 규제 지침을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함. 블루 수소를 생산하거나 발전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자들은 탄소포획 기술을 활용해 95% 이상의 탄소를 포집해야 함. 탄소 포획(CC), 연소 후 탄소포획(PCC),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의 탄소 포집 기술을 허용함. 만약 탄소 포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명시해야 함
- 이 규제 지침은 메탄이나 정제 연료 가스를 사용해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획하는 대규모 산업용 발전소를 대상으로 함. 영국 정부는 발전소가 환경 허가를 받고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소가 '저탄소'로 분류되고 발전소의 수명 주기 배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 규제 지침은 영국 정부의 수소생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최소 10GW의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작년 초 정부는 에너지 보안 전략 회의에서 수소 용량 목표치를 5GW(기가와트)에서 10GW로 높임
- 이 중 최소 절반 이상은 그린 수소여야 함. 그린 수소는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사용하는 발전 시설에서 전기로 산소와 수소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추출 및 생산함. 나머지는 블루 수소로, 메탄이나 다른 화석연료 기반 가스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수소를 말함
- 영국 자문업체이자 글로벌 에너지 그룹 웨스트우드는 영국 발전소 송유관에 총 용량 13GW의 블루 수소 프로젝트가 있다는 분석을 발표함. 외신들은 "이번 규제 지침이 영국 블루 수소의 발전소를 설계 및 개발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 블루 수소 기술이 영국 생산 능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겠다"고 평가함
- 환경청의 규제 산업 담당 이사인 조지나 콜린스(Georgina Collins)는 “수소는 우리의 저탄소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 지침은 친환경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 이번 규제지침은 실현가능성,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 먼저 탄소 포획 기술이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어 탄소를 상업적 규모로 포획하기에는 부족함. 블루 수소가 그린 수소에 비해 확장성이 높지만 저탄소 기술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임
- 블루 수소의 기후 영향력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CCS는 상업적으로 성숙된 기술이 아니며, 포획되는 탄소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영국 기후 씽크탱크 E3G의 수석 정책 고문인 줄리엣 필립스(Julliet Phillps)는 “탄소 포획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루 수소에 투자만 하게 된다면 영국 넷제로 전환 방향에서 뒤처질 것”이며 "불안정한 국제 가스 시장에서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블루 수소에만 치우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그는 이어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수소는 ‘화석연료 트로이목마’가 될 수 있다”며 “높아지는 천연가스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청구하면서 탄소 배출량 감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임. 즉, 블루 수소는 값비싼 천연가스 시장 흐름에서의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의미임
-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FA)는 지난 5월 영국이 가스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두고 블루 수소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함. 영국의 가스 도매가격은 적어도 2027년까지 2021년 수준보다 3배 더 높을 것으로 보임

- IEEFA 유럽 에너지 파이낸스 연구소장 아르준 플로라(Arjun Flora)는 “블루 수소는 그린 수소를 위한 ‘교량(bridge)’로서의 인식이 강했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스 가격은 열량 당 평균 50펜시 이하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2021년 7월에는 100펜스, 2022년 8월에는 400펜스를 웃돌자 경제성 측면에서 블루수소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임
- 그는 “블루 수소 프로젝트의 대규모 파이프라인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어떤 프로젝트가 더 발전된 단계로 진행될지는 알기 어렵다”며 “블루 수소가 경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스 상황이 먼저 바뀌여야 한다”고 주장함